

추석 연휴 7일 휴장… 자산운용사들 “현금보단 분산 투자”

연휴 기간 자산관리 전략

FOMC 발표에도 ‘장기전략 유지’
머니마켓·채권형 ETF 활용 추천
금·반도체·관광 등 성장테마 분산

사상 최장인 추석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마음은 벌써 해외 휴가지와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주식 투자를 생각하면 불안하다. 연휴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조마조마하기 때문. 그대로 들고 가도 될지, 미리 팔아치워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떨까.

자산운용사 ETF 본부장들은 “포트폴리오를 크게 흔들 필요는 없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글로벌 주요 이벤트가 연휴 중 잇따라 예정돼 있지만, 현금을 과도하게 늘리기보다는 장기 전략을 유지하고 일부 유동성만 단기 안전자산으로 옮겨두라는 조언이다.

◆전문가 “자산, 분산 하라”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다. 국내 증시는 이 기간 문을 닫지만 미국 시장은 정상적으로 거래된다. 7일에는 미국 무역지표가, 8일에는 연방공개



ChatGPT로 생성한 ‘추석 휴장 기간이 오기 전 투자 방향을 고민하는 투자자들’

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이며, ISM 제조업지수와 신규주문 등 경기 선행 지표도 발표된다. 특히 금리 인하 속도와 규모를 둘러싼 연준 내부의 견해차가 다시 부각될 수 있어 연휴 후 국내 증시 변동성을 자극할 가능성이 지적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장기 전략의 수정에는 신중하다.

김승철NH아문디자산운용ETF본부장은 “ETF 자체가 분산투자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며 “원자력을 담았다면 K뷰티처럼 성격이 다른 테마를 함께 구성하고,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이나 고배당 ETF를 반대 포지션으로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총괄본부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배당 확대, 세제 변화로 국

내 주식시장 리레이팅 기대가 높아졌다”며 “미국에 치우쳤던 포트폴리오를 한국과 여타국가로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장 대응 전략은 ‘안정적 운용’에 방점이 찍혔다.

노아름 KB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추석 연휴 중 미국 FOMC 의사록과 일부 지표가 나오지만 시장 방향을 뒤흔들 이벤트는 없다”며 장기 테마 ETF는 유지하되 일부 자산을 채권이나 현금성 ETF로 조정해 리스크를 관리할 것을 조언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운용본부장도 “단기성 자금은 ACE 머니마켓액티브 ETF를 활용해 연휴 기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연금계좌 등 초장기 투자금은 굳이 전략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했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 본부장은 “급격한 포지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변동성이 부담된다면 기존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여유자금만 PLUS 머니마켓 ETF 같은 파킹형 상품으로 옮기면 된다고 덧붙였다.

◆AI 반도체 노력라

전문가들은 업종별 ‘기회’도 제시했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 본부장은 “국내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

와 상법 개정 모멘텀으로 금융·반도체·지주회사 ‘금반지’가 유망하다”며 금융과 지주사의 주주환원 매력, AI 반도체 성장세를 언급했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현금을 쌓아두기보다는 실적과 성장성이 확실한 고확신 ETF에 집중해야 한다”며 미국 AI 전력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Capex 확대와 실적 서프라이즈를 짚었다. 김남호 타임폴리오자산운용 ETF운용 본부장은 긴 연휴를 앞두고 불확실성 회피 심리가 생길 수 있지만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며 “연휴 후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이 관광·소비 업종을 살리고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시장의 핵심 조언은 ‘긴 연휴에도 흔들리지 말 것’이다. 글로벌 이벤트를 주시하면서 단기 유동성만 점검하고, 기존 ETF 중심의 장기 테마와 포트폴리오는 유지하라는 게 다수 운용사의 결론이다. 연휴 직후 3분기 실적 시즌에 따른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근본적인 자산배분 방향을 바꿀 만한 대형 변수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피지컬AI협회 “온디바이스 AI’로 글로벌 강국 도약 목표”

AI 대전환 선도 위한 발대식 열어 피지컬AI 국가 대전환 전략 발표 韓, 범용 AI 모델 개발 비전 제시

대한민국이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 기술을 바탕으로 피지컬AI 강국으로 거듭나게끔 지원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언할 피지컬AI협회가 1일 국회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피지컬AI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스피5000 시대를 선도하는 피지컬AI’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피지컬AI 국가 대전환 전략’을 설명하고 발대식을 열었다.

피지컬AI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로봇, 사물인터넷(IoT) 기기, 차량 등 물리적 실체에 탑재돼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 각광받고 있다. 피지컬AI는 기기자체에서 AI 연산을 직접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기술을 바탕으로 시각·언어·행동을 통합한 VLA(Vision·Language·Action) 모델에 기반한다.

유태준 초대 피지컬AI협회장 겸 마음 AI 대표는 인사말에서 “언어를 넘어서 시각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비전·랭귀지·액션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 인류의 노동 형태가 바뀌는 구조적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며 “챗GPT의 LLM(거대언어 모델)은 지식과 언어영역에 한정되나, 피지컬AI는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걸 중심으로 한다. 미국과 중국도 피지컬AI에 대한 연구를 막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피지컬AI를 선도하기 위해서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 피지컬AI협회는 그

런 역할을 담당하고자 설립됐다”며 “한국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월드 모델, 범용 피지컬AI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다양한 환경을 이해해서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지컬AI협회는 ▲산업 도메인별로 환경 구축 및 데이터 축적 전략 수립 ▲가상공간과 실제공간을 아우르는 통합 피지컬AI센터 구축 전략 제시 ▲피지컬AI 표준 제정 및 시험 인증 기준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이재명 정부에서 AI 대전환 분야 15개, 초혁신경제 15개 분야 등 총 30개 분야에서 새 성장전략을 갖고 있다”며 “모든 30대 분야가 AI 대전환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풍

부한 자금 아래 성장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를 150조원 조성해서 투자하게 될 텐데 AI·반도체 분야에 60조원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피지컬AI 가치사슬과 국내기업의 위상, 그리고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전략을 발표한 이태희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는 “네이버에서 분류하는 로봇 테마주가 50개 정도다. 해당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관철인데, 영업이익이 문제다”며 “돈을 못 벌고 있다. 대부분 적자”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PER(주가수익비율)는 괜찮다. 최근 시장에서 미래 수요 반영해서 투자자들이 이들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라며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 기업의 재무제표상 수요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모태 펀드 등을 만들어서 이

들 사업자들이 수요를 일으켜서 시장 수요에 의해 RFM(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가치사슬에 있는 주요 플레이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기업) 퓨리오사AI의 김한준 공동창업자 겸 최고 기술책임자(CTO)는 “퓨리오사AI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주어진 소스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전지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더 많은 AI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나에 있다”며 “컴퓨팅 비용을 줄이고 더 쉽게 제품을 돌릴 수 있고 강력한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해서 이런 미션을 갖고 전력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 산업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

기후부 공식 출범… 김성한 장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첫걸음”

에너지·기후 정책 통합 829명 가동
전력·산업·수송 전 분야 녹색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탄소중립 산업 육성

에너지와 기후정책 기능이 합쳐진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1일 세종에서 출범했다. 현 정부에서 신설된 기후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 체제로 구성되며 부처 인원은 총 829명이다.

김성한 기후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기후부 출범식에서 “기후부 출범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시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또 “기후부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녹색 대전환을 이끄는 부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제1 차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물관리정책실(수자원정책관·물관리정책관·물이용정책관),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이 배치된다. 제2 차관 산하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이 설치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 육성 등을 담당한다.

기후에너지정책실에는 기존 ▲기후

에너지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국제협력관 외에 ‘수소열산업정책관’이 새로 추가된다. 에너지전환정책실 산하에는 △전력산업정책관 △전력망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으로 구성된다.

기후부 출범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과 규제와 진흥 기능이 통합된 에너지 정책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김 장관은 “기획과 실행을 하나의 부처에서 하게 된 만큼 전력·산업·수송·건물·생활 등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후정책 총괄 기능은 환경부에, 감축수단은 산업부에 있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게 김 장관의 입장이다.

김 장관은 △탈탄소 전환 로드맵 제시 ▲시장 매커니즘 반영 탈탄소 정책 추진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국민 안전보호 차원에서 기후안전망 구축 ▲국민의 환경권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탄소중립기본법을 비롯해 온실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식에서 김성한 장관이 출범사를 하고 있다.

/뉴스

가스감축목표(NDC),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기후·에너지 관련 굵직한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추진력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김민세 기자 kys@